이덕일의 '역사의 창'

식민사학계의 미투는?

그간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행 사건에 대한 '미투'운동이 거세다.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 무수한 '을'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성공하려면 성폭행에서 범위를 확대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모든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미투'의 대상은 그릇된 학설이 하나뿐인 '정설'(定說), 즉 도그마로 변질된 성역이다. 이 정설이 조선총독부 학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이 식민사관 카르텔은 역사학적 방법론을 깡그리 무시하면서도 이에 도전하는 학자들을 '유사' '사이비' '재야' 등의 딱지를 붙여 매장하는 매카시 수법으로 생존하고 있다.

역사학은 당대에 쓴 1차 사료로 과거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식민사관 카르텔에는 이런 역사학적 방법론이 통하지 않는다. 이 카르텔은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 일대라고 우기지만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는 당대의 사료는 하나도 없는 반면 지금의 중국 하북성(河北省) 일대에 있었다는 당대의 사료들은 차고 넘친다.

한 예로 중국 한(漢)나라의 정사인 '한서'(漢書) 지리지에는 낙랑군 산하 열구현(列口縣)이 나온다. 열수(列水)라는 강의 하구에 있었다는 현이니, 열구를 찾으면 낙랑군의 위치를 알 수 있다. '후한서'의 군국지는 "열은 강 이름인데, 열수는 요동에 있다(列水在遼東)"라고 말하고 있다. 열수가 요동에 있었으니 열구현도 당연히 요동에 있었다. 그러나 식민사학 카르텔은 열수는 지금의 대동강이고, 열구는 황해도 은율(殷栗)이라면서 '정설'이라고 우긴다. 이 '정설'을 사료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학자들은 과거 성폭행을 고발했던 여성들처럼 매장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존 카터 코벨이라는 미국인 학자가 있었다. 일본 미술사를 공부하던 중 일본 고대 문화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물론 한국인 학자들까지 사실을 거꾸로 말한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나이 든 (한국)학자들은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기에……그러는 것인가? 아직 서른이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을 테니까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케케묵은 주장들을 일소해 버렸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코벨 박사가 이 글은 쓴 것이 1981년인데 이 땅의 젊은 학도들은 거꾸로 갔다. 이들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사실은 100년 전에 논증이 끝났다면서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이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치켜세웠고, 진보 언론들은 이 '케케묵은 주장'에 대학자라도 출현한 양 대서특필했다. 이들의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지만 코벨 박사의 바람처럼 "식민사학이 틀렸다"고 나섰다면 과거 성추행을 공개했던 여성들이 겪었던 수난의 반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비난만 할 수도 없다.

식민사학 카르텔은 아직도 갈라파고스다. 새 정권에서 임명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이 '동북아역사지도' 사업 재개를 선언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2015년까지 국고 47억 원을 투입해 만든 것이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인데, 한사군은 모두 북한에 그려 중국에 넘겨주고, 조선총독부의 '삼국사기' 불신론을 추종해서 4세기에도 백제·신라·가야를 그리지 않았고, 독도도 일관되게 삭제했다. 그래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고 국고 47억 중 10억 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지고 폐기된 사업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새 정권에서 중국 공북공정 소조나 일본 극우파가 만들었다면 명실이 상부할 이런 지도를 다시 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청와대 해임 청원 게시판까지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역사관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간 김도형과 그 카르텔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는 문재인 정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기 고

5·18 특별법, 통과 이후가 중요하다

최 경 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법안 마련과 본회의 통과까지 함께 해주신 5·18 관련 단체, 전남대 5·18 연구소를 비롯한 법학과 교수님, 광주시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고에 감사 드린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고비와 진통이 있었다.

먼저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새롭게 제정되는 법이므로 국회법상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국회 통과 속도가 더뎌지기도 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여야 합의로 9명의 위원으로 결정됐다.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측 교섭 단체에서 4명, 야당 측 교섭 단체 및 비교섭 단체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문안이 변경됐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권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결국 범죄 혐의가 현저할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돼 의결됐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까지 조사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을 수용해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터 준 5·18 단체의 용단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로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중요한 건 특별법 이후다. 먼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여야 정치권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진상규명 의지와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확고한 진상규명 의지를 갖는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 광주에서 모든 것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일은 광주의 몫이다.

특히, 정부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상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진상조사 위원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조사에 임해야한다. 특별법에 조사위원회의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 고발 및 수사 의뢰권, 특별검사 임명 요구권 등이 주어진 만큼 이를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사격 의혹·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조사 한계를 스스로 밝힌바 있다. 특별법을 통해 조사권이 부여된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미완의 역사인 5·18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헬기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 등 모든 의혹들을 밝혀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학살의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지 이번에는 밝혀야 한다. 모든 의혹과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5·18을 둘러싼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38년 동안 묻혔던 모든 진실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당시 관련된 인사들의 협조와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과거처럼 은폐하거나 진상조사의 요구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목표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5·18 특별법의 목적은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의 총체인 종합보고서 발간을 기대한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종합보고서가 발간되면,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의 사례처럼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각종 분쟁과 재판의 기준이 되고 국정교과서 서술의 기준이 되며 각종 평화·인권 교육에도 활용이 될 것이다.

특별법의 한계도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내서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확고한 진상규명 의지이다.

기 고

모두가 안전한 정월 대보름을 기원하며

안 용 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올해도 어김없이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 올해는 3월 2일)이 다가왔다. 정월 대보름은 우리 고유의 5대 명절로 설날만큼 비중이 크다. 사람들은 새로운 해가 시작된 후 처음 맞는 대보름날을 맞아 한 해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 개인의 기복행사로 부럼을 깨기도 하고 오곡밥과 나물반찬 등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기도 한다. 또 여러 사람이 모여 갖가지 민속놀이와 풍속을 즐기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달맞이 소원 빌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이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국에서 많은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린다.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달집을 태우기도 한다. 시민들은 액막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 다양한 풍속놀이들을 즐기면서 흥겨운 놀이 마당을 펼친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정월 대보름 전후에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각종 행사에 '불'이 사용됨에 따라 화재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정월 대보름 전후 사흘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8건으로 산림 2.11㏊를 태웠다. 산불 발생 건수와 산림 소실 면적은 2009년 12건 3.35ha, 2013년 8건 2.48ha, 2014년 5건 1.42㏊, 2015년 12건 8.44ha, 지난해 10건 2.76ha로 집계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500만 원을 물어야 하고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장에서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시기에는 작은 담뱃불로도 큰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광주환경공단에서도 이 시기에 집중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소방계획에 따라 사전 예방 활동 및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환경 기초 시설 주변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광주천에서는 불조심 캠페인을 시행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영산강 승촌공원 캠핑장에는 간이 소화기를 배부하여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스스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 음성 통보기능을 갖춘 재난 안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혹시 모를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취약 지역을 자체 선정하여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의 안전 전문가 하인리히는 "불안전한 상태 또는 거동을 제거하면 사고 및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인리히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5단계로 제시했다. 사고가 일어나는 1단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또는 가정 환경에 의한 결함이다. 2단계는 개인적 결함으로서 이는 개인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3단계는 불안전한 상태 또는 거동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불안전한 상태라는 것은 위험물이 방치되어 있다든가, 위험한 장소가 있다든가 안전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불안전한 거동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기계 등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바로 이 3단계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면 나머지 4단계인 사고와 5단계의 재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인리히의 연구 결과이다.

이와 같은 하인리히의 견해에 따르면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것이고 재해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 선조는 정월 대보름에 징검다리에서 치는 노디굿으로 흥을 더했다. 노디굿은 작은 개울이나 도랑에 설치해 놓은 노디(징검다리)에 이상이 없는지 혹은 보수할 곳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비는 일종의 고사굿이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한판 굿판을 벌여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한 조상의 빛나는 지혜라고도 볼 수 있다.

광주환경공단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각종 훈련 등을 추진하겠지만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社 說

요동치는 전남 지사 선거…빅매치 무산되나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지사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반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사실상 출마로 기울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남 곳곳을 돌며 기반을 다져온 박지원 의원은 최근 권노갑 고문과 만나 전남 지사 출마 여부를 논의했으며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박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다 광주·전남에서 민주평화당의 세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그제 '전남 도지사라는 그 오랜 꿈에 마침표를 찍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주 의원은 "단 한 석의 국회의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당 조직을 정비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합당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도 출마 포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3당의 중진급 의원 대결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남 지사 선거 빅매치는 일단 무산된 모양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평당 등이 의석수를 고려해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요청을 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당위원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공식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선거전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중도 포기를 하게 될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해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이래저래 후보들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셈이다. 후보들의 처지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고려한다면 각 당은 명확한 공천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야 할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전남 지역 정신재활 시설

전남 지역에는 5700여 명의 정신장애인이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신재활 시설은 고작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두 곳뿐인 울산·세종에 이어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정신장애인들은 재활 시설이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에 나서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등록된 정신장애인 10만여 명 중 광주의 정신장애인 수는 2952명, 전남은 5725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정신장애인 수는 38.9%인 3만8924 명인데 비해 비수도권의 정신장애인 수는 61.1%인 6만114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 정신재활시설협회에 등록된 305곳의 정신재활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53.1%에 달하는 162곳이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광주·전남은 정신장애인 수가 비슷한 타 시도에 비해 재활 시설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 수가 2952명에 이르는 광주의 경우 정신재활 시설이 여덟 곳 밖에 없지만 3003명인 대전은 무려 30곳이 들어서 있다. 정신장애인 수가 5725명인 전남은 5214명인 충남과 비슷했지만 정신재활 시설은 단 세 곳으로, 충남의 22곳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정신장애인들은 재활 시설이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원정 진료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해서 당사자는 물론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주지를 벗어나는 탓에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해 이들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일한 대가

누구나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윌리엄 서머셋 모옴의 소설 '달과 6펜스'에서 달은 예술가가 갖는 이상이나 꿈, 6펜스는 그와 반대되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 당시 6펜스는 1971년까지 영국에서 유통되던 가장 낮은 단위의 은화였으며, 작은 것이나 하잘 것 없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다.

6펜스짜리 동전은 19세기 후반 머나먼 조선에서도 몇 년간 실제로 유통된 적이 있다. 133년 전인 1885년 3월 1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여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영국 해군이 섬 주민들에게 자국의 화폐를 사용한 것이다. 해군 기지 건설을 위해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영국 해군은 주민들을 고용하면서 일당으로 6펜스를 지급하고, 이를 싣고 온 자국의 식료품이나 공산품으로 바꿔 주었다.

주민의 일당은 영국 해군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차별 없는 처우에 주민들은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일을 해도 굶주림에 허덕였던 주민의 입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주고 생필품으로 바꿔 주기까지 하는 생면부지의 서양인들이, 대가 없이 일만 시키는 정부 관리보다 더 나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영세 기업이나 점포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춰 주기도 어렵다. 한데 상대적으로 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잦은 것은 물론 비정규직 문제, 채용 비리까지 연이어 터져 나온다. 노동 투여 시간이나 질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높은 임금과 막대한 복리 후생을 보장받는 이들 대기업·공공기관의 임금 체계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저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있지만, 마지노선마저 지키기 어려운 현실은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임금 수준이 높은 '임금의 양극화'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기업의 막대한 수익은 하청업체와 소비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 역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한 가치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원칙이 바로 서야 할 시기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chadol@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